

범죄예방 MAGAZINE

현장경찰

LIVE

VOL.

23

2026. Aug

이달의 키워드

걸을 지키다

- 특별기고 - 왜 다시 순찰인가
- 시골 경찰 라이브 - 내가 바위에 매달려 생각한 것들
- 현장을 함께 지켜온 동료, 경찰견 아더 이야기
- 건축의 눈으로 보는 경찰 - 한국 치안의 두 중심축

Photo by _김성헌 경위, 충남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ONTENTS

01	이달의 칼럼 — 범죄예방, 현장에서 답을 찾다 대구청 생활안전부장	04
02	경찰청 소식 경찰·소방공동 대응 간담회 · 범죄 예방 경진대회 준비 · 장비 개발 협의체 · 보호조치 우수사례	06
03	시도 경찰청 소식 경기북부청 수해 예방점검 · 울산청 자연재난 대비 훈련 · 전남 광주청 명칭 변경	12
04	현장 LEVEL-UP 전자 장치 부착자 대응 절차 · 가정폭력 출입 조사 처벌 규정 신설 · 모바일 신분증 부정 사용	15
05	현장 REPORT 순찰차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 모범 자율방범대 활동 취재	19
06	특별기고 — 왜 다시 순찰인가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 교수	23
07	기획기사 경찰 퇴직 문화 이렇게 만들어 가자	25

08	해외 경찰 동향 인구 소멸 지역의 경찰개혁	29
09	라이브 초대석 건축의 눈으로 보는 경찰, 임진우 건축가	32
10	순찰 NOTE 시골 경찰 라이브 - 경찰견 아더 이야기	35
11	경찰을 뒤흔든 역사의 한 순간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일본의 코번	41
12	경찰관의 서재 (도서) 고립의 시대 · 경찰역사 탐방	43

현장경찰 LIVE — 범죄예방 MAGAZINE | 2026년 8월호(제23호)

발행일	2026.07.25	발행인	이승협
창간일	2024.09.19.	편집장	이연형
발행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에디터	이준형
홈페이지	www.police.go.kr	편집디자인 / 일러스트	이상미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97	제작	MA.U 스튜디오
		인쇄처	범신사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려면 사전에 [발행기관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 그리고 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시민의 안전이라는 오래된 이름 앞에서

박재석 경무관 · 대구광역시 경찰청 생활안전부장



● 강력범죄 대응 FTX 드론훈련 — 대구청 드론관제차량과 현장 운용 경찰관들

가장 오래된 질문에 앞서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일은 어느 시대에도 경찰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경찰청장 직무대행님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처럼, 시민의 안전은 경찰이 존재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민안전’이라는 말을 다시 곱씹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결국 경찰이 본래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시민이 느끼는 안전은 거창한 문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저녁, 늦은 밤 귀가하는 시민이 골목에서 두려움을 덜 느끼는 순간, 신고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온한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비로소 안전은 완성됩니다. 저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치안의 성과라고 늘 생각합니다.

① ‘대구시민안전 치안TF’, 새로 만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대구경찰청의 「시민안전 치안TF」도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TF는 새로운 일을 하나 더 만들어 현장에 부담을 없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경찰,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수사 등 각 기능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서로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방향성을 함께 세우기 위한 틀에 가깝습니다. 시민의 위험은 결코 한 기능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안전 치안도 결국 현장 중심의 시선과 기능 간 협업 속에서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노력은 시민께도 잘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순찰을 하고 어떤 점을 보완하고 있는지를 시민이 이해할 때, 경찰의 활동은 단순한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공감과 지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안은 경찰만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이 함께 이해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신뢰해 주실 때 비로소 더 튼튼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강력범죄 대응 FTX — 순찰로봇 합동 대응훈련



학원가 AI 순찰로봇 '패트로버' 합동순찰 (대구북부경찰서)

②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최근 대구경찰은 드론, AI, 순찰로봇과 같은 미래치안기술도 현장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수성못 디지털 합동순찰, 대구북부경찰서의 학원가 AI 순찰로봇 '패트로버' 합동순찰, 강력범죄 대응 FTX 드론훈련은 모두 시민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먼저 덜어 드리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시연이 아니라, 위험을 더 빨리 보고, 더 정확히 파악하고,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과 발을 더 멀리 닿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드론이 영상을 보내와도 그것을 읽고 판단하는 것은 현장 경찰관이고, 로봇이 순찰을 도와도 시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은 결국 사람인 경찰관입니다.

③ 시민의 안전만큼, 직원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의 안전만큼이나, 그 안전을 지키는 직원들 또한 소중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이 지치고 무너지면 시민 곁을 오래 지킬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픈 채 버티는 일, 마음이 힘든데도 말하지 못하는 문화, 휴식이 필요한

데도 눈치를 보게 되는 분위기는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치안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와 정신상담, 마음돌봄과 같은 복지 지원은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한 기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는 여러분께는 성과에 상응하는 꾸준한 보상과 격려가 따라야 합니다. 복잡해지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지역경찰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범죄, 관계성 범죄, 피싱 범죄, 취약계층 보호, 생활주변 위험요인 대응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장 인력의 장기적 보강이 필요하고, 특히 교대근무자들이 휴가와 회복의 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휴식은 배려가 아니라, 더 오래 시민 곁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④ 시민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하루

시민안전 치안의 진짜 얼굴이 화려한 정책 문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은 밤 골목을 순찰하는 발걸음, 통학로에 서 있는 형광 조끼, 새벽 지구대의 불빛, 그리고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지역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배경에는 늘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하루가 곧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지역경찰 여러분입니다. 앞으로도 대구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그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을 지켜 드리는 일을 함께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늘 시민 곁에, 그리고 서로의 곁에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① 경찰청 소식 첫 번째

경찰·소방, 긴급신고 공동 대응 고도화를 위한 첫걸음

경찰청-소방청 공동 대응 2026년 1차 간담회 개최



● 간담회를 주재하는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 경찰청-소방청 긴급신고 공동대응 1차 간담회 전경

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 소방청과 함께 「긴급신고 공동 대응 2026년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소방청 119상황실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긴급신고 공동대응 가이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상반기 공동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신고 접수부터 출동, 현장 처리까지의 절차상 개선점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

- 1 **공동 대응 요청 기준 명확화** — 기관별 판단 차이를 줄이기 위해 요청 사유를 구체화하고 시스템 기록 체계를 개선하기로 함.
- 2 **취소·반려 사례 공동 분석** — 발생 원인을 제도·시스템·현장 운영 문제로 구분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기로 함.
- 3 **실무형 공동 대응 매뉴얼 마련** — 요청 기준, 기관별 역할, 주요 사례를 정리해 현장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4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 양 기관 교육기관 간 교류 및 합동 교육 확대, 정기 실무협의 운영을 통해 역량 강화 및 상호 이해 제고를 추진함.

향후 계획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동 대응 매뉴얼 마련, 취소·반려 사례 분석, 교육·협력체계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오는 **10월 제2차 공동 간담회**를 열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의 혁신, 더 안전한 일상을 만들다

2026년도 범죄예방대응 경진대회 개최 안내



● 2025 범죄예방 경진대회 — “안전을 디자인하다”



● 우수사례 발표 무대에 오른 현장 경찰관

범죄 예방은 정책 문서가 아니라, 오늘도 거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경찰청은 「국민 체감안전 제고를 위한 예방순찰 활성화 계획」(‘26.5.8.)에 따라 예방순찰을 현장 활동의 기본으로 재정립하고, 그 성과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2026년 범죄예방대응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6만 범죄예방대응 기능 동료 여러분, 이번에는 그 노력이 확실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예방순찰, 현장 치안의 중심에 서다

예방순찰은 위험 요소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주민의 안전으로 연결하는 치안의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성과를 인정받을 기회가 부족했던 예방순찰이,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 경찰관의 핵심 직무로堂堂히 자리매김합니다.

참여 문턱은 낮추고, 보상은 파격적으로

과거 CPO 중심의 성과발굴에서 벗어나 지역경찰·광역예방순찰대·풍속담당·정신응급대응팀 등 범죄예방대응 기능 모든 현장 근무자가 경진대회의 주인공입니다. 성과에는 아래와 같은 확실한 보상이 따릅니다.

특별승진

23명

성과에 걸맞은 파격 인사

특별승급

32명

노력을 확실하게 인정

특별성과 포상금

+α

우수사례 적극추천

당신의 사례가 대한민국 치안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형 현장 활동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치안 정책의 자산이 됩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순찰이 아닌,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성공의 경험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현장의 노력을 성과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2026년 범죄예방대응 경진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2026년 범죄예방대응 경진대회는 26년 9월7일까지 경찰청 추천완료, 9월 중 선발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각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로 문의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 미래 치안장비가 되다

지역경찰 「장비개발·도입 공동협의체」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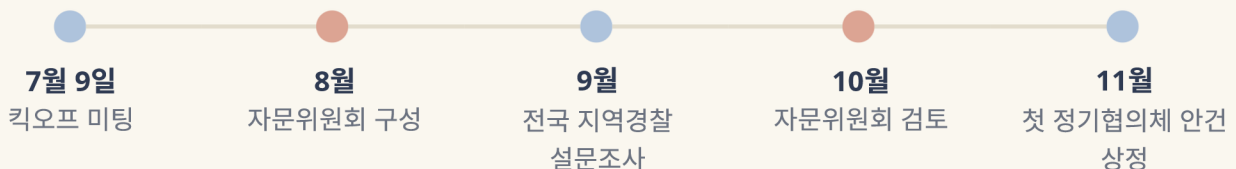
— ‘현장에서 쓰기 좋은 장비’로 방향을 잡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지역경찰역량강화과는 2026년 상반기 미래치안정책국 장비운영과와 함께 「장비개발·도입 공동협의체」를 추진해왔다. 장비운영과의 장비개발·도입 전문성에 지역경찰역량강화과가 수집한 현장 의견을 더해, 제원, 성능뿐 아니라 현장 경찰관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장비를 함께 만들자는 취지다.

새로운 소통창구

그동안 현장 의견은 각종 회의나 현장활력소 게시글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기되었을 뿐, 이를 정기적으로 취합·분석해 정책 안건으로 반영하는 체계적 절차는 없었다. 앞으로 지역경찰역량강화과가 이 역할을 맡아, 정기 설문조사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무기통합 교관 등 현장전문가와 교수·연구원·법조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공식 안건으로 다듬은 뒤 공동협의체에 상정한다.

추진 일정



4단계 장비개발·도입 프로세스

STEP 1

사전소요 요청

현장 수요를 공식
절차로 접수

STEP 2

연구·개발 협업

제안서 평가 등 단
계별로 현장 의견
반영

STEP 3

현장실증

통합물리력 교관과
지역관서 동료들이
실사용 검증

STEP 4

도입 후 개선

미비점을 재상정하
는 선순환 구조

현장실증은 단순 제원 확인이 아니라 **실사용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무기류는 조작 편의성과 물리력 체계 연계성, 보호장비는 방호 성능과 장시간 착용 피로도, 외근조끼 등은 다수 장비 동시 착용 시 무게 분산과 활동성을 평가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AI 발전에 대응한 미래형 순찰차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신규 장비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중심’ 지역경찰 장비·개발도입 추진

현장 소통 중심의 4단계 협의체 프로세스로, 현장 맞춤형 장비 개발·도입을 실현합니다



● 「장비개발·도입 공동협의체」 운영 구조 (자료: 지역경찰역량강화과)

오늘의 작은 외침이 내일의 장비 혁신으로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한 손으로도 쉽게 꺼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도 확실히 작동하는 장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장비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우리 동료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앞으로 지역경찰역량강화과는 전국 지역경찰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소통창구이자, 현장의 요구

를 장비 연구개발부터 도입단계까지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로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설문조사, 현장 간담회, 전문가 검토, 정기·수시 공동협의체, 현장 실증 등 다양한 활동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장 경찰관이 급박한 순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국민과 경찰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장비
— 지역경찰 장비 혁신의 출발점과 최종점은 언제나 현장이다.



보호자치 분야

'26년
2분기

우수 사례

금년 상반기 시도청 등의 노력으로
정신응급 합동대응팀 10개팀 → 14개팀

주취해소센터 2개소 → 4개소로

확대 되었습니다.

#국민안전 #현장지원

정신응급대응팀



정신응급 상황에
현장출동하여 평가
· 개입 · 연계 지원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응급실내
치료가 필요한
주취자 보호 시설



주취해소센터



주취자 단기 보호와
해소를 지원하는 시설



주취자 보호 관련 조례



주취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지역

범례



정신응급대응팀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주취해소센터



주취자 보호 조례 제정 지역

전국 합계



정신응급대응팀

28



주취자응급의료센터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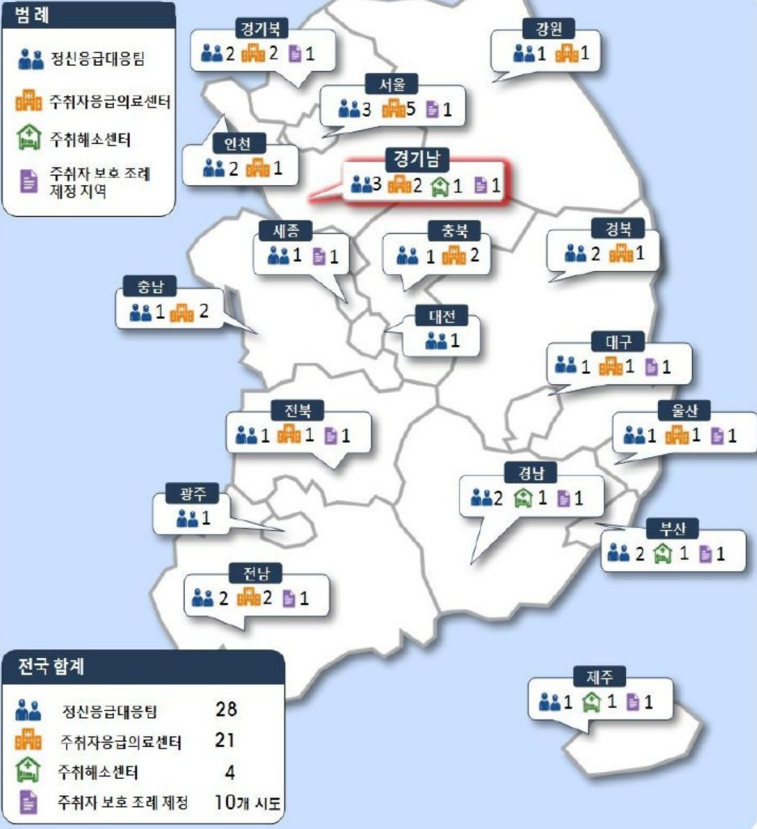
주취해소센터

4



주취자 보호 조례 제정

10개 시도



정신응급대응 현황



응급입원 의뢰

'26년 22.3% 상반기 12,038건 전체 24,000여건(추정치)

'25년 상반기 9,845건 전체 20,839건



대응팀 현장출동

'26년 59.1% 상반기 7,359건 전체 15,000여건(추정치)

'25년 상반기 4,626건 전체 9,815건



대응팀 응급입원 점유율

'26년 상 49.9%(6,002건)
'26년 목표 44%를
넘었어요!!

'25년 상 37.1%(3,651건)

분야별 우수사례

인프라
분야

【경기남부청 범죄예방질서계】 주취해소센터 신설

- ▶ (경과) '26. 1월부터 해소센터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소방본부·의료기관과 등 협의(9회), '25년 조례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센터 운영 예산 기반 마련
- ▶ (인원) 총 7명(경찰4+소방3), 일시점 2명(경찰1+소방1)
- ▶ (개소일·장소) '26. 4. 9., 덕산병원(경기도 수원 소재)



인프라
분야

【경남청 범죄예방질서계】 주취해소센터 신설

- ▶ (경과) '25. 11월~ 해소센터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소방본부·의료기관 등과 협의(8회), '26. 7월 주취해소센터 운영·협업체계 구축 관련 「주취자 보호조례」 제정
- ▶ (인원) 총 9명(경찰6+소방3), 일시점 3명(경찰2+소방1)
- ▶ (개소일·장소) '26. 6. 1., 조은금강병원(경남 김해 소재)



인프라
분야

【경기남부청 범죄예방질서계】 정신응급합동대응팀 전환 및 권역별 운영

- ▶ (개요) 정신응급대응팀 인력증원과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전문요원 증원, 권역별 합동대응팀 운영 추진
- ▶ (인원) 총 30명(경찰24+전문요원6), 일시점 3명(경찰2+전문요원1)
- ▶ (개소일·장소) '26. 4. 1., 경기 부천·군포·수원 3개 권역 운영
- ▶ (언론보도) '26. 6. 30. MBN, '정신응급대응팀 확대 운영 100일... 현장경찰 부담 줄었다' 등 언론사 15건 긍정적 운영성과 보도

인프라
분야

【경기북부청 범죄예방질서계】 정신응급합동대응팀 전환 및 권역별 운영

- ▶ (개요) 정신응급대응팀 인력증원과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전문요원 증원, 권역별 합동대응팀 운영 추진
- ▶ (인원) 총 16명(경찰12+전문요원4), 일시점 3명(경찰2+전문요원1)
- ▶ (개소일·장소) '26. 4. 11., 경기 고양·의정부 2개 권역 운영

정책
분야

【충남청 범죄예방질서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치료연계 구축

- ▶ 일일 112신고 분석과 응급입원 대상자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견 시 행정입원 요청 등 지역사회 및 치료연계 기준을 수립, 반복적 신고 및 정신응급대응 상황 감소 유도

※ '26년 상반기, 고위험군 대상 행정입원 조치 등 118명 등 전년 동기 대비 530% ↑

☑ 고위험 정신질환자 선별, 행정입원 연계 등 치료연계와 반복신고 감소 유도

정책
분야

【강원청 범죄예방질서계】 정신응급 현장 대응 매뉴얼 제작

- ▶ 강원지역 인프라 등 특성을 고려한 휴대형 포켓북 매뉴얼 제작을 통해
 - △ 현장조치 시 유의사항 △ 처리 절차 △ 입원요건 및 절차 △ Q & A
 - △ 참고자료 수록 등 현장 실용성 제고

※ '26년 1~3월 현장 의견수렴 → 4~5월 매뉴얼 수립·검수 → 6월 제작·배포

☑ 지역적 특성과 휴대성을 고려해 제작한 맞춤형 매뉴얼로 현장 활용성 제고

대응
분야

【부산청 정신응급대응팀】 대응팀-해소센터 협력 자살위험자 보호조치

- ▶ 6. 25. 하루동안 주점 등에서 만취상태로 112신고되어 주취해소센터로 3회 입소, 보호 중 자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정신응급 대응팀 연계 및 응급입원 조치/ 보호조치 기능 간 협업을 통해 알콜중독 및 자살위험이 의심되는 시민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연계

☑ 촘촘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와 적극적인 업무기반 마련

대응
분야

【부산청 정신응급대응팀】 대응팀-해소센터 협력 자살위험자 보호조치

- ▶ 6. 25. 하루동안 주점 등에서 만취상태로 112신고되어 주취해소센터로 3회 입소, 보호 중 자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정신응급 대응팀 연계 및 응급입원 조치/ 보호조치 기능 간 협업을 통해 알콜중독 및 자살위험이 의심되는 시민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연계

☑ 촘촘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와 적극적인 업무기반 마련

대응
분야

【제주청 정신응급대응팀】 다액현금 보유 고위험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 ▶ 4. 6. 약물 복용을 중단한 정신질환 아들이 폭력을 행사 한다는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 대상자에게 타해위험성 높아 응급입원 연계를 결정했으나, 의료기관 내 절차 진행 중 대상자 물품(캐리어)에서 현금 6천6백만원 발견되어 보관 어려움을 이유로 입원 거부, 즉시 농협과 협조해 예금조치 후 치료연계

☑ 의료기관의 입원거부 시안을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치료연계



동료분들이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헌신이
더 큰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①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청, 선제적인 재난 취약지역 점검



● 가평군 수해 복구 현장을 점검하는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6. 16. 도민의 안전한 여름을 담보하기 위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난 취약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경기북부청 김동권 청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가평군 소재 캠핑장을 방문하여 수해 복구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가오는 여름철 추가적인 토사 유출 등 산사태 우려가 되는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한 시설점검을 넘어, 혼란스러운 재난 상황 속에서도 주민 보호조치와 현장 안전 확보가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 태세를 중점으로 정비하였다.



● 산사태 피해 지역에서 재난 대비 상황을 보고받는 현장 점검단

울산경찰청, 하절기 풍수해 침수 대비 현장실습 교육



● 울산역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현장 점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현장실습 교육



● 교육에 참여한 울산청 순찰팀장들

울산경찰청 유윤종 청장은 지난 6월 23일, 재난 취약지인 울산역 지하차도를 방문 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울산경찰청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시뮬레이션 기반의 실습 교육을 추진하였다. 7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진행한 이번 '하절기 풍수해 침수 대비 현장 실습'은 지역경찰의 일선 현장을 지휘하는 순찰팀장 100명이 참석하였다. 교육 내용은 단순한 이론 습득을 넘어 ▲ 침수공간 탈출체험 ▲ 침수계단 탈출체험 ▲ 침수공간 보행체험 ▲ 침수 차량 탈출체험 ▲ 강우인지 체험 등 총 5가지 체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의 설명에 따라 체험을 해본 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전문성 내재화'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또한 교육을 받은 순찰팀장이 순찰팀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전체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5가지 체험 교육 구성

1

침수공간 탈출체험

밀폐된 침수 공간에서 수압을 이기고 탈출하는 절차를 체득

2

침수계단 탈출체험

물이 차오르는 계단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훈련

3

침수공간 보행체험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찬 공간에서 균형을 잡고 이동하는 감각을 습득

4

침수차량 탈출체험

물에 잠긴 차량 내부에서 문·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방법을 실습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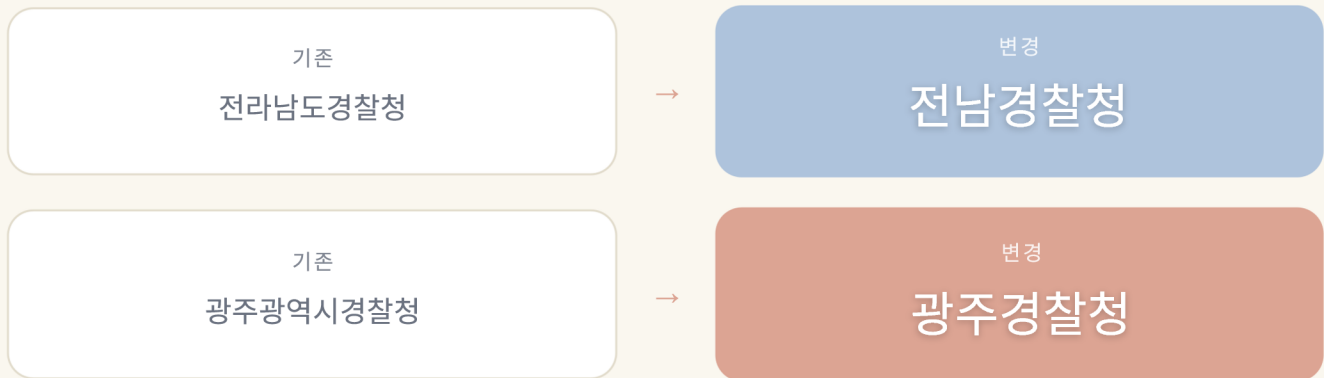
강우인지 체험

집중호우 상황의 시야·소음을 재현해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도록 훈련

광주·전남경찰청 명칭 변경, 통합특별시 출범 반영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전남 경찰청이 7월 1일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새 체계로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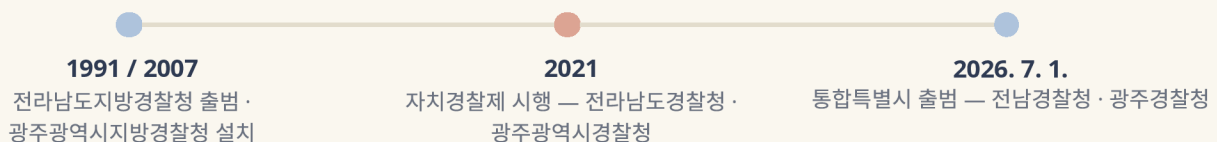
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은 이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경찰청'과 '광주광역시경찰청' 명칭을 각각 '전남 경찰청', '광주경찰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 전남경찰청 지휘부가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전남경찰청 명칭 변경 제막식을 열고 있다.

1991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으로 출범한 뒤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전라남도경찰청'으로 바뀌었으며 이번 행정 통합에 맞춰 다시 명칭을 조정했다.

광주경찰청도 같은 날 명칭 변경을 적용했다. 2007년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설치된 이후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광주광역시경찰청'으로 변경됐으며, 이번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① 지역경찰관 교육자료 (요약)

전자장치 부착자 관련 스토킹·가정폭력 고위험 대상자 대응절차

경찰청 ↔ 법무부 협업 대응체계 ('26. 7. 6. 시행)

1. 왜 필요한가

특정범죄(성폭력·유괴·살인·강도·스토킹)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사람이 별건 스토킹·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잠정·임시 조치)를 받으면, 경찰과 법무부(보호관찰소)가 정보를 공유해 '가해자는 보호관찰관, 피해자는 경찰'이 동시에 대응합니다. 지역 경찰관의 역할은 112신고 대응과 피해자 보호입니다.

2. 대응 흐름

단계	내용	담당
①	부착자 접근금지 법원 결정 → 보호관찰소에 정보 통지	경찰·법원 → 법무부
②	부착자가 접근금지구역·피해자 1km 이내 접근 → 경보 발생	법무부(관제센터)
③	보호관찰관이 112신고 → 지역경찰·여청수사팀 출동 지령	경찰(112상황실)
④	현장 대응: 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이, 피해자는 경찰이 담당	법무부 + 경찰
⑤	위험 해소 시 상황종료 / 접근금지 위반 시 검거·수사	경찰

3. 지역경찰관의 역할

상황	지역 경찰관이 할 일
112신고 접수	사건종별 '스토킹/가정폭력', Code 1 이상 확인. 1km → 500m → 100m로 반복 신고될 수 있음(동일 사건). SAN으로 사후관리·신고이력 확인 후 전파
현장 출동	피해자와 통화해 위치·상황 확인, 접근 사실 통보, 근접보호·이동조치 판단. 가해자 대면·연락은 보호관찰관 담당
위반 확인 시	접근금지 거리 이내 접근이 확인되면 경찰이 현행범 체포 등 사건 접수(보호관찰관은 수사권 없음)

4. 반드시 지킬 3가지 원칙

- 부착자 위치정보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착자에게 직접 연락·출동하지 않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위반 확인시 체포는 예외)
- 피해자는 대개 가해자의 부착 사실을 모릅니다 — 현장에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상황종료는 보호관찰관의 통지(Code 3 하향)를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현장을 종결합니다

※ 본 자료는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대응 절차('26.7.6. 시행)」를 지역경찰관 현장 대응 중심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 현장 출입·조사 방해죄 처벌 강화

① 개정 핵심

구분	내용
개정 전 → 후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가정폭력방지법
근거	§20②1의2 (신설) — §9의4③ 위반(현장조사 거부·기피 등 방해) 처벌
행위 주체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 구성원인 공범)

② 현장 출입 — 상황별 법적 근거 & 절차

상황	근거 법령
가정폭력 의심,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 필요	가정폭력방지법 §9의4
생명·신체·재산 위해의 구체적 개연성	경직법 §7
생명·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해 우려, 위해 방지 또는 피해자 구조 필요	112신고처리법 §8③
범죄 혐의점 충분	형소법 §216

- 출입 전: 소속·계급·성명 고지(가정폭력방지법 §9의4④ 신분증표 제시) + 출입·조사권 및 불응 시 벌칙조항 고지
- 조사 시: 피해자 반드시 대면·안전확인, 가·피해자 완전 분리(순찰차 동승도 금지)

③ 방해죄 성립 판단

- 해당 O: 문 안 열어줌 / 피해자 대면·안전확인 방해 / 피해자 진술 저지·거짓진술 강요
- 체크포인트: 동기·목적·방법·결과 및 이후 태도 종합판단, 피해자 신고내용에 범죄혐의 포함 또는 제3자 신고시 장소 특정하여 혐의점이 발견되어 가정폭력 신고가 명백함에도 경찰의 출입요구에 가정폭력행위자가 불응하거나 피해상태 확인을 고의적으로 방해
-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처벌이 더 강력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5년↓징역 또는 1천만원↓벌금)

! 주의 — 단순 진술거부는 방해죄 아님
헌법상 진술거부권 영역이므로 방해행위 (출입 저지·대면 방해 등)와 구분해서 판단·기록할 것

④ 판례 2건 — 적법성 갈림길

무죄 2020도8129

피해자 이미 집 밖으로 피신(피해자 보호 위한 긴급성 X), 사전에 출입 사정 고지 없이 임의 진입 → 위법

유죄 2024도594

신고 진실성 정황 O, 피해자 안전 확인을 위한 출입조사 협조 거듭 요청에도 완강히 거부하여 진입 → 적법

※ 핵심: 피해자 보호 필요성 + 사전 고지 + 출입·조사 방해행위 인정

⑤ 현장 체크리스트

- ✓출입 근거 법령 확인 → 신분·권한 고지 → 피해자 대면·분리조사
- ✓방해 발생 시 바디캠 촬영(촬영 고지) + 참고인 진술서 즉시 확보
- ✓사건처리 전 방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가정폭력처벌법 §2④)에 해당하는지 검토

“모바일 신분증 부정사용, 법의 사각지대에서”

서송배 경위 ·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 LIVE 기자단



● 부산 서면 유흥가 일대에서 신분증 도용 예방 안내문을 부착하는 서면지구대 경찰관

사건사고가 집중되는 연말 연시, 경찰은 클럽, 헌팅포차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도용 집중 예방 활동을 펼친다. 이 시기는 특히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 관련 신고가 몰리는 시기다. 최근 1년간 접수된 신분증 도용 관련 112 신고 약 200건 가운데 약 4분의 1인 50여 건이 12월과 1월 사이, 즉 연말연시에 몰려 있다. 현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 화면 캡처본'과 위·변조 이미지 파일이다. 스마트폰 화면 하나로 만들어지고 퍼지는 만큼 단속도, 처벌도 간단치 않다.

사례마다 다른 법 적용... "신고해도 처벌 못 하는" 현실

문제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신분증 부정사용 사례들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법적 결론에 이른다는 데 있다. 부정사용된 신분증이 운전면허증인지 주민등록증인지, 실물인지 모바일 이미지인지, 그리고 명의자가 실재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

실재하는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사용한 경우,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지 파일은 '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8도2560) 때문이다. 반면 실재하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사용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의2호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더 까다로운 건 인터넷 링크로 접속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인물 명의의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도, 공문서부정행사죄도 성립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법의 처벌 규정은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한 조작·부정사용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라는 문언 자체가 명의자의 실존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타인의 모바일 신분증 앱(PASS 등)이 실행된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받아 제시한 경우는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처럼 똑같이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딜레마다.

현장의 목소리: "처벌 법규 공백, 현장 혼선으로 이어져"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SPO) 김정훈 경장은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워서 이 문제를 마주하는 현장 경찰관이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 65건 중 절반가량이 모바일 신분증 관련 사건이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SNS에서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에 위조 신분증 이미지를 사고팔거나, 또래끼리 공유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처벌 규정의 공백은 현장 대응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처벌 규정이 없는 사례는 대부분 훈방으로 끝나고, 수사과에서도 불입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을 근거로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송치까지 이어진 사례도 일부 있었지만, 송치되더라도 초범 청소년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확립된 판례가 쌓이기 어려운 구조다. 명확한 실무지침이나 판례가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법 적용과 집행의 일관성 문제가 불거지고,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가 법률 문제로 번질 소지도 있다.

여기에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위·변조 모바일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만, 정작 신분증을 부정사용한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같은 일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처벌이 안 되더라도 그냥 끝내지 않는다"

경찰은 처벌 규정의 공백을 현장 대응으로 메워왔다. 여성 청소년과·수사와·지역경찰이 함께하는 합동 실무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과 기준을 일원화했고, 불입건·불송치 사건이라도 일일모니터링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 위반 청소년을 선도 프로그램으로 연계했다. "모바일 신분증을 도용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는 것을 막고 재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지역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업소를 대상으로 위조 신분증 부정사용 사례 설명, QR 검증 방법 교육, 경고 포스터 부착 등 순찰·홍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2026년 8월, 드디어 법이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전자정부법 개정이다. 2025년 3월 양부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 전자정부법이 2026년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 위·변조 모바일 신분증 행사, 모바일 신분증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이미지 제작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법정형은 주민등록법위반과 같은 수준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캡처 이미지는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의 신분증 부정사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현장의 판단이다. 디지털 범죄는 기술보다 대응 속도가 늦어질 때 더 빠르게 확산된다. 그 최전선에서 고민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예방 홍보 활동이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핵심 학습자료 — 현장 경찰관이 알아두어야 할 요점

1. 신분증 부정사용 사례별 처벌 가능 여부 (2026. 8. 28. 개정법 시행 전 기준)

사례	적용 법률	처벌 여부	근거
타인의 실물·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공문서부정행사죄 불성립	처벌 불가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 아님 (대법원 2018도2560)
타인의 실물·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 가능	주민등록법 §37①8의2
허무인 명의(실존하지 않는 인물)로 생성된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위반·공문서부정행사죄 모두 불성립	처벌 불가	① §37①4의2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 통한 부정사용에 한정 ② §37①8의2 '다른 사람'은 실존 인물 전제 ③ 형법상 이미지 파일은 문서성 결여
타인의 모바일 신분증 앱이 실행된 휴대전화 자체를 건네받아 제시	주민등록법 위반 +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가능	주민등록법 §37①8, 도로교통법 §150의3의3

실무 포인트: 같은 "신분증 도용"이라도 ① 신분증 종류(운전면허증 vs 주민등록증), ② 형태(이미지 파일 vs 앱이 실행된 실물 휴대전화), ③ 명의자의 실재 여부, 세 가지 축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갈린다.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기보다 세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2. 2026. 8. 28. 시행 — 개정 전자정부법 제76조③ (신설)

다음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위반과 동일한 법정형).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미지 파일·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모바일신분증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것을 행사한 자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이미지·전자문서·복사본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행사한 자
부정사용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위·변조 포함)을 제공·제공받거나 알선한 자

→ 시행 이후에는 허무인 명의 이미지 부정사용, 캡처 이미지 유통·알선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현재의 처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 단, 시행일 이전 행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발생 시점 확인이 중요하다.

3. 현장 대응 체크리스트

- ✓신고 접수 시 신분증 종류·형태·명의자 실재 여부를 먼저 구분해 처벌 가능 법률을 파악한다.
- ✓처벌 규정이 없는 사례라도 불입건·불송치로 종결하지 말고 SPO에게 통보해 선도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 (재범 방지·인식 확산 차단 목적).
- ✓무리한 체포는 법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벌 근거가 불명확한 사안은 신중히 접근한다.
- ✓소상공인 대상으로 위·변조 모바일 신분증 식별법, QR 검증 방법을 안내해 2차 피해(청소년보호법위반 행정처분)를 예방한다.
- ✓2026. 8. 28. 이후에는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캡처 이미지 부정사용·유통·알선도 처벌 대상임을 숙지하고,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을 구분한다.

① 현장경찰 장비사용기

현장의 시선으로 본 순찰차

— 차급은 커졌지만, 여전히 남은 불편함들

서현 경위 · 경남창원서부경찰서 북면파출소 / 현장경찰 LIVE 기자단

예전 순찰차는 아반떼급 준중형 차량이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대다수 관서가 쏘나타급 중형 차량을 운용하고, 비포장 도로가 많은 관내에서는 SUV를, 최근에는 수소차와 전기차까지 배치되고 있다. 급이 한 단계 올라간 셈이다.

쏘나타 순찰차는 이전 아반떼급 차량보다 실내가 넓어져 체격이 큰 직원이나 뒷좌석에 태우는 피의자·요구호자를 상대하기에 한결 수월해졌다. 트렁크에 장비를 가득 실어도 엔진 출력에 여유가 있어 이동에도 무리가 없다. 다만 차급 상향이 가져온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정작 매일 그 차를 몰고 나가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불편이 이야기되고 있다. 현장 의견과 장비개선 건의를 토대로, 그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본다.

1. 장비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

지금의 순찰차는 민간 차량에 경찰 장비를 하나씩 덧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112단말기, 무전기, 경광등 제어시스템이 좁은 공간에 뒤섞여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순찰차 전용 장비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다만 최근 보급되는 신형 순찰차는 내부 배선과 배치가 한결 정돈되어 가는 모습이다.

관련 의견

- 112단말기 내비와 차량 내비가 중복 설치되어 있어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 고온의 외부 환경 탓에 사제 블랙박스의 부착 스티커가 자주 떨어져, 매립형 설치가 필요하다.
- 전면 유리에 붙은 순찰차캠과 거치대가 교통사고 시 탑승 경찰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일부 차량은 무전기와 마이크가 조수석 옆에 붙어 있어 무릎에 부딪히는 등 불편이 있다.



● 112단말기 내비와 차량 내비가 중복 설치된 순찰차 내부



● 조수석 옆에 설치된 무전기와 마이크 — 무릎에 닿는 위치다

2. 수납 공간이 너무 좁다

수납 공간의 협소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중형 차량을 기반으로 하지만, 개인 차량과 달리 직원들이 실제로 쓰는 공간은 앞자리뿐이다. 출동할 때마다 PDA폰, 프린터,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가방, 서류가방, 경광봉, 우천 시 우산까지(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챙겨야 하는데, 앞자리 수납은 도어포켓과 글로브박스가 전부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앞자리 중앙이나 천장에 추가 수납장을 두거나, 도어포켓 자체를 지금보다 키우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뒷좌석은 피의자나 요구호자가 탑승하는 공간이라 장비를 두었다가는 분실 위험이 있고, 트렁크는 이미 라바콘, 소화기, 방패, 구명환, 방검복, 구급함, 로프 등으로 가득 차 '도라에몽 주머니'를 연상시킬 정도다. 여유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



● 라바콘·구명환·방검복 등으로 가득 찬 순찰차 트렁크

3. 경광등 시인성이 떨어진다

교통사고 처리는 경찰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데, 현재 경광등은 일자형이라 뒤따르는 차량이 있거나 사선으로 주차했을 때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119구급차처럼 360도 시인이 가능한 경광등을 참고 하거나, 경광등 작동 시 '전방 사고 처리 중이니 서행하십시오' 같은 음성 안내가 함께 나오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실제로 순찰차 뒤에 다른 차량이 있거나 사선으로 주차했을 때, 경광등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확인됐다.



야간 현장의 순찰차와 119구급차 — 경광등 시인성이 비교된다

4. 그 밖의 의견들

기어 조작 방식에 대한 불만도 있다. 버튼식 기어는 범인 추격 등 긴급 상황에서 조작이 번거롭고, 순찰차마다 버튼식·칼럼식·다이얼식이 섞여 있어 운행할 때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칼럼식: 운전대 옆에 기어가 위치한 방식)

썬팅 농도에 대한 의견도 있다. 지금 수준으로는 차량 내부가 그대로 노출돼 각종 민원의 소지가 있고, 특히 뒷좌석에서 피의자를 체포할 때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인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좀 더 짙은 썬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5. SUV·수소차·전기차 순찰차

필자가 근무하는 관서에는 SUV(투싼) 순찰차가 있다. 가파른 비탈길이나 비포장 지역에 출동할 때 유용하고, 차체가 높아 전방 시야가 넓다. 특히 장시간 운전에도 허리가 굽지 않아 척추 건강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다만 스텝 하이트(지면에서 차량 문틀 발판까지의 높이)가 승용차 33cm, 투싼 44cm로 높다 보니, 주취자나 피의자를 뒷좌석에 태우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소차(넥쏘)와 전기차(아이오닉5) 순찰차도 관서별로 한 대씩 배치되어 있다. 두 차종 모두 승차감이 좋고 조용하지만, 주행 반응이 민감해 차체가 쏠려거린다는 의견이 있다. 1회 충전(혹은 충전) 시 300~400km를 주행할 수 있어 유지비가 저렴한 편이다. 수소차는 완충에 약 5만 원, 전기차는 30분이면 80%까지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차는 관서 내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수소 충전소는 장거리 이동이 필요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전기차 순찰차는 탑재된 전자장비가 많아 배터리 용량에 여유가 없다 보니 에어컨과 히터 성능이 약하고, 겨울철에는 잦은 방전으로 시동 꺼짐이나 문 잠김 현상이 반복된다고 한다.

6. 유사 출동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

비슷한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119와 사기업 보안업체(에스원)를 직접 찾아가 봤다. 119 구급차는 119센터의 협조를 받아 비교해 보니, 차체가 높은 구급차의 경광등 위치가 우리 2단 리프트 경광등보다 조금 더 높았다. 문자 표출 기능은 없었지만 여러 방향에서 시인성은 더 좋았고, 글로브박스 앞 폰 거치대, 천장 수납장과 안전모 그물망, 좌석 사이 수납공간, 360도 서라운드뷰, 후진 시 '후진 중입니다' 음성 안내까지 갖추고 있었다. 에스원 출동 차량은 중형(K5)과 소형(모닝)을 함께 운용하는데, 담당 직원에 따르면 1인 출동 체계로 운영되며 줄음방지시스템이 탑재돼 있고 조수석은 의자를 떼어내 고객 키박스함을 설치해 쓴다고 한다.

7. 해외 사례: 싱가포르 신형 순찰차의 좌석 설계

해외 사례 중에는 싱가포르 경찰청(SPF)이 눈에 띈다. 2020년부터 순차 도입한 현대 투싼 기반의 신형 순찰차(Fast Response Car)는 원격 조작 서치라이트, 사이드미러 하단 센서, 전후좌우 카메라 등 눈에 보이는 첨단 장비도 갖췄지만, 정작 주목할 부분은 운전석·조수석 시트의 하단부 설계다.

참고 싱가포르 SPF 신형 순찰차의 좌석 설계

권총, 테이저건 등 각종 장비가 매달리는 근무벨트(듀티벨트)를 착용한 채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근무 특성을 고려해, 앞좌석 시트의 허리·엉덩이가 닿는 하단부를 인체공학적으로 재설계했다.

듀티벨트에 걸린 장비가 시트에 눌리지 않도록 좌석 형태 자체를 조정함으로써, 장시간 근무 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과 눌림으로 인한 피로·통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설계다.

뒷좌석은 반대로 접근했다. 가죽 시트나 수납공간, 컵홀더 없이 미끄럼 방지 홈이 있는 단단한 평판형 좌석을 적용해, 피의자가 시트 틈에 물건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고 청소도 쉽게 했다.

우리 순찰차의 좌석 역시 오랜 시간 근무벨트나 각종 장구를 착용한 채 앉아 있어야 하는 근무 환경은 다르지 않다. 단순히 승차감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앞좌석은 근무자의 신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뒷좌석은 피의자 호송이라는 목적에 맞게 설계를 이원화하는 접근은 우리 순찰차 개선 논의에도 참고할 만하다.

8. 차세대 순찰차, 어디로 가고 있나

최근 기아의 PV5 7인승 차량을 기반으로 한 'AI 순찰차'가 첫선을 보였다. 고해상도 AI 카메라로 흉기 소지자나 쓰러진 시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상부에 탑재된 AI 드론을 띄워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이나 사각지대까지 살필 수 있다고 한다. (2026. 2. 22. 동아일보, '서울에 AI·드론 순찰차 뜬다')

향후 자율주행 기능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 이전에 실제로 그 차를 모는 직원들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충실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 전 인천에서는 심야에 출동하던 순찰차가 도로에 누워 있던 여성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있었다. 이후 전방·후방 충돌방지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범인 추격이나 불가피한 충돌 상황이 잦은 경찰 업무 특성상 이를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점유율 1위인 포드의 '폴리스 인터셉터 유틸리티'는 제조사가 처음부터 경찰의 성능 요구조건에 맞춰 설계·개발해 납품하는 방식이다. (2024. 9. 2. 서울경제, '포드, 미국 경찰을 위한 인터셉터 공개') 국내 경찰차는 약 1만 7,350대 규모로 추산된다. 우리도 언젠가는 제조사가 처음부터 경찰의 성능 조건을 반영해 별도로 개발한 차량을 보급받을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본다.

오늘도 각종 격무에 애쓰시는 수많은 직원들, 그리고 순찰차 안에서 밤낮없이 장시간 운전대를 잡고 계신 외근 직원 여러분 모두 늘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미국 최초 무인 순찰차량 등장

- 미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차량 소개 영상 (플로리다)



2025 포드 인터셉터 유틸리티

- 경찰 요구조건에 맞춰 개발된 2025 포드 인터셉터 유틸리티

제5회 전국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개최

“주민 곁 가장 가까운 안전지킴이, 이제는 전문성으로 답하다.”

박형수 · 대한민국 자율방범중앙회 사무총장



●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심폐소생술(CPR) 경연



● “함께하는 방범! 안전한 대한민국!” — 전국에서 모인 자율방범대원들

지난 6월 20일 충남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자율방범대원과 가족 등 2,000여 명이 함께한 제5회 전국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대원들은 지역을 넘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체 치안을 위한 역량을 함께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 대회는 기존의 체육행사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폐소생술(CPR)과 교통수신호 경연을 처음 도입했다. 실제 민생치안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직무를 중심으로 대원들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자율방범대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아산경찰서 교통경찰관과 아산소방서 119구급대원이 평가에 참여해 현장성을 더했다.

“하나, 둘, 셋.” 구급대원의 구령에 맞춰 경기장 곳곳에서 심폐소생술 경연이 시작됐다. 교통수신호 경연장에서는 차량 흐름을 가정한 상황 속에서 대원들이 침착하게 수신호를 이어갔고, 관람석에서는 정확한 동작이 나올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경연이 끝난 뒤에는 지역별 순찰 경험과 우수 활동 사례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이어 전국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한 우수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공로 포상도 진행됐다. 수상자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고, 동료 대원들은 함께 축하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장은 경쟁보다 서로를 응원하고

자긍심을 나누는 분위기로 가득했고, 공동체 치안을 위해 흘린 땀과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김태국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방범활동도 이제는 경험을 넘어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라며, “전국의 우수 활동 사례를 함께 배우고 서로의 역량을 채워가는 과정이 지역 치안 수준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대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참가 대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한 대원은 “다른 지역의 우수한 활동을 직접 보며 많은 자극을 받았다”며 “심폐소생술과 교통수신호를 전문가에게 다시 점검받아 현장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원은 “전국의 동료들과 활동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수확이었다”며 “지역으로 돌아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촘촘한 순찰활동으로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직무경진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전국 자율방범대가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함께 지역사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안전을 지키는 공동체 치안의 핵심 파트너다. 앞으로도 경찰과 자율방범대는 민·경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왜 다시 순찰인가

- 보이는 경찰이 주는 범죄두려움의 감소(feat. AI의 한계) -

황정용 ·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면 되지 않는가.” 최근 일선, 특히 젊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순찰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이라 한다. 인력은 부족하고 신고 대응만으로도 벅찬데, 순찰은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적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순찰을 치안활동의 근간으로 일관되게 강조해 왔고, 그 방침은 해외라고 다르지 않다. 이 글은 그러한 방침이 관성이 아닌 근거에 기반한 것임을 세 가지의 축 - 범죄두려움 감소 효과, AI 시대 순찰의 재정의, 그리고 ‘보이는 경찰’이 가지는 정당성 -을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순찰은 범죄를 제거하지 못해도 두려움을 없앤다

순찰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 1970년대 후반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Newark)에서 실시된 도보순찰 실험은 순찰 강화가 실제 신고 건수나 범죄율 자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동시에, 순찰이 강화된 구역의 주민들은 우리지역의 범죄 문제가 덜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인식했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덜해도 된다고 느꼈으며, 경찰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서 뚜렷하게 높아진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이후 월슨과 켈링이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을 통해 지역사회 치안과 무질서 관리 문제에 주목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 결과는 순찰 무용론의 근거가 아니다. 순찰이 수행하는 기능이 ‘범죄 진압’뿐만 아니라 ‘시민의 체감안전 제고’로 연계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후 플린트, 볼티모어 등의 순찰실험에서도 유사한 두려움 감소 효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시민의 ‘범죄두려움 감소’, 경찰청의 표현대로라면 ‘체감안전도 제고’는 사실 삶의 질과 직결된다. 내가 직접 범죄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우리지역이 불안하다 느끼고 밤에 친구조차 만나러 나가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삶은 질적으로 양호하다 할 수 있을까?

AI 예측치안의 역할과 한계

— 왜 최종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몫인가

AI시대의 도래에 맞춰 경찰청이 AI를 도입하려는 취지 중 가장 직관적인 것은 줄어드는 인력을 보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정된 순찰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I 기반 예측치안(predictive policing) 시스템은 과거 신고·범죄 데이터를 학습해 범죄 우려지역을 예측하고, 해당 지역에 순찰 인력이나 범죄예방 시설 확충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누구를 범죄자로 예측할 것인가’, ‘어느 구역에 실제로 인력을 투입할 것인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으며, 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예측치안이 이미 드러난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크리스티안 럼과 윌리엄 아이작의 연구는 편향된 과거 단속 데이터를 학습한 예측치안 알고리즘을 통해 시카고 경찰이 ‘고위험 인물’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과잉 단속을 강화하는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럽 연합의 인공지능법(EU AI Act)이 개인의 프로파일링이나 성격적 특성 평가만을 갖고 특정인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평가하는 AI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이러한 위험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AI 알고리즘이 읽지 못하는 현장의 위험성 추정은 여전히 인간 경찰의 강점이다. AI는 결코 순찰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순찰의 표적성을 높여주는 도구이다. 그리고 이 도구의 편향 또는 오작동을 막는 최종 판단의 몫이 바로 경찰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은 오히려 AI 시대에도 대체될 수 없는 현장 경찰관의 자산이다.

‘보인다’ 것은 감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주는 것이다

순찰을 주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인식이다. 최대한 명찰을 가리고, 신고 출동 이외에는 시민과의 접점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그것이다. 이러한 회피는 심리적으로는 자연스러우나 장기적으로 경찰의 권한은 약화시킨다. 경찰을 ‘범죄와 싸우는 전사-범죄 대응 중심’으로 보는 전통적 경찰활동 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자-범죄예방 중심’으로 보는 현대 경찰활동의 프레임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는다. ‘전사’는 시민을 잠재적 위협으로 상정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며 방어적 태세를 취하는 반면, ‘지역사회 문제해결자’는 단속을 전제하지 않는 일상적 접촉 자체를 시민과의 관계를 쌓아 장기적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즉 단속을 전제하지 않는 접촉이 경찰을 지역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통로가 됨을 뜻한다.

시민이 경찰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순응하는 것은 경찰의 단속 실적이나 검거율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 행사 방식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인식에 좌우된다. MZ 세대

로 갈수록 결과보다 절차의 정당성에 민감하다는 연구 결과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시민이 경찰을 정당한 권위로 받아들이는가는 ‘경찰이 얼마나 자주 눈에 띄고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법을 집행하며 얼마나 책임 있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순찰 중 신원을 감추려는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개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책임성 있는 권위’를 포기해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선택이 된다. 시민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경찰은 시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

물론 경찰관 개인의 신원 노출은 결코 가벼이 다룰 문제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 노출을 자제해야 할 현실적 필요도 있다. 다만 그 특정상황에 대한 판단과 ‘순찰 자체가 감시이자 위협이므로 최소화하는게 상책이다’라는 일반화는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는 순찰이 시민의 곁에서 그들 삶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얻는 활동이라는 본질에 부합하지 못한다.

마치며

순찰은 체감안전, 즉 시민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을 실증적으로 낮추고, 경찰활동의 정당성을 축적한다. AI는 순찰의 전략적 판단을 보조해 주지만 판단의 주체는 여전히 경찰이다. 순찰을 신고와는 별개의 잉여 임무가 아니라, 범죄 예방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본연의 임무로 다시 바라볼 때, 서두에 던진 질문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 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소개

황정용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경위로 임용되어 20년간 현장에서 근무한 뒤 2021년 총경으로 명예퇴직했다. 재직 중 한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찰학 석·박사 과정을 밟으며 112 신고 대응체계와 청소년 비행 문제를 연구했다. 현재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